



제 6회

통  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모의국무회의 가이드북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제 6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반도!



Contents

I.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1. 개요		08
① 국무회의란?		08
② 통일모의국무회의란?		09
2. 제6회 통일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10
① 팀 구성하기		
② 통일 모의국무회의 토의 주제 선정하기		
③ 직책 부처 설정하기		
④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⑤ 담당 수행 직책별로 토론 쟁점 찾아내기		
⑥ 직책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⑦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주제에 대한 정책을 의결하기		
3. 대본 작성 요령		14
①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② 대본 작성의 개요 정하기		
③ 대본 표지와 내지 내용 보기		
④ 대본 표지와 내지 샘플 보기		
4. 통일교육원 발간 참고자료		16
5. 통일모의국무회의의 안건의 예 (2015~2019년 수상팀)		17

II. 제6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1. 목적 및 개요		20
2. 시행 주제		
3. 시행 내용		
4. 시상 내역		
5. 심사 기준		
6. 대회 일정		
7. 문의		
8. 예선 및 결선 상세일정		22
9. 참가신청서 양식		24

III.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기획안 및 대본 예시	1. 기획안 예시 (제5회 최우수상 수상팀)	28
	2. 대본 예시 1 (제5회 최우수상 수상팀)	32
	3. 대본 예시 2 (제5회 우수상 수상팀)	60

IV.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1. 최우수상 수상 수기	80
	2. 우수상 수상 수기	82
	3. 장려상 수상 수기	84

V. 제5회		88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		

제 6회 통일 모이콧무회의 경연대회 걸리잡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반도!



I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I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TIP 1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아래 국무회의 의사규칙을 숙지하고 대본에 반영해야 합니다.

1. 개요

① 국무회의란?

가. 대통령이 하는 일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며 의결하는 최고정책 심의기관입니다.

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정책이란?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2) 선전 및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대통령령안
- (4) 예산 및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7) 국회의 해산
- (8)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의 요구
- (9) 영전수여
- (10) 사면 및 감형과 복권
- (11) 행정 각부간의 권한 확정
- (12) 정부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및 분석
- (14) 행정 각 부의 중요정책 수립과 조정
- (15) 정당해산의 제소
-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에 대한 심사
- (17) 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 (18) 기타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등

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 외)이 국무회의의 구성원입니다.

라. 국무회의를 여는 진행순서는 개회-국민의례-개식사-주요안건 토의 및 처리-폐회입니다.

마.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구성원 1/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 결정한 사항들을 추진합니다.

② 통일 모의국무회의란?

가. 모의국무회의란 실제 국무회의 형태를 모델로 하여 학생들이 대통령 이하 각 부처 장관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나. 주요 정책의 범위는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대한민국입니다.

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참여의식으로 통일 정책을 발굴합니다.

라. 정책을 선정하여 모의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수준을 높입니다.

마. 다른 부처 간의 협의나 논쟁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일의식을 지닙니다.

바. 모의국무회의를 완성하면서 국가의 통일정책에 참여해 본 주인공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체득합니다.

TIP 2

통일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대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TIP 3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대한민국을 가상하는 만큼, 통일 편익에 중점을 두어 안건을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제6회 통일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① 팀 구성하기

- 동아리 혹은 함께 공부하는 학과 동료들과 마음을 합하여 모의국무회의의 참여를 위해 팀을 구성합니다.
팀원의 인원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6명에서 13명까지 가능합니다.
- 행사 참여 및 진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팀 대표(팀장)를 선출합니다.

② 통일 모의국무회의 토의 안건 선정하기

안건의 전개

총 시간이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장관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안건을 선정하여 토의하는 형식으로 전개하십시오.

관련 자료

안건 선정 관련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통일미래 비전과 관련된 자료를 찾거나, 2014 통일문제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발간),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통일한국 2040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DBpia, 국회도서관 등의 논문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일교육원 발간자료는 붙임 참조)

2015년~2017년에 실시한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진대회의 우수작을 참조하여도 좋습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마당-통일교육 연구자료-공모전 자료'에 게시)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주제는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입니다.

준비 포인트

통일 전후,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통일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통일된 한국은 수많은 가능성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동시에 통일한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편익들을 최대한 활용할 새로운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 정책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TIP 4

아래 자료를 통해
통일이 가져다 주는 국내외
적 편익을 알아보고,
통일 모의국무회의 토의 안
건 선정에 참고해 보세요.

통일의 국내적 편익

인구 강국 : 통일로 저출산·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

- UN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통일이시 생산가능인구가 전보다 4% 증대(약 20만여명)하고 내수 및 노동시장의 동시 확대가 가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통일 후 남북 병력 감축으로 약 133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확보가 가능

군비 감축에 따른 재정효율성 증대

- 현대경제연구원(2010)에 따르면 통일 시 국방비 절감효과는 2013년~2050년까지 누적 총 1조 8,862억\$
- 국방비 절감효과는 연구별로 최소 246조원(조동호, 1997)~최대 1조 8,862억(현대연구원, 2014)까지 편차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산업 생산성 증대

- 통일 후 북한의 노동 생산성 102.9% 증대 예측(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통일한반도(조선일보, 2014.1.6)

- 현재 남한 대북리스크로 신용등급 평균 2등급 하향화
-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는 "남북 통일 후 5년 안팎으로 국가 신용등급은 한두 단계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
- 통일로 한국 신용등급이 인상되면 이자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재정적 효율성 증대

고용 창출

-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따르면 통일 후 40년간 연평균 65만 6천명, 총 2,953만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
- 한국정치학회(2014)는 통일 후 10년간 연간 119만명, 총 1,190만명 취업유발효과를 예측
- 통일 후 북한 3차산업 발달은 360만명의 고용창출효과 유발(통일연구원, 2014)

2,600만 관광대국(조선일보, 2014.1.14)

- 현대경제연구소(2014)에 따르면 통일한반도에는 매년 2,600만 이상의 관광객 방문 예상
- 관광객 유입을 통해 약 60만명의 취업유발효과도 발생

자원 대국, 통일한반도

- 지하자원 국내 조달로 연간 153.9억\$ 절감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통일한반도의 안보적 편익 : 안보불안의 근본적인 해소

통일한반도의 인도적 편익

- 이산가족 문제의 해소
- 북한주민 인권 문제의 해소
- 냉전 청산으로 인한 사회갈등비용 절감액은 188조원(조선일보, 2014.1.6)

통일한반도의 문화적 편익

-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50년 통일 시,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는 통일 전 10건(세계 21위)에서 12건 이상(19위)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측
-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50년 통일 시, 하계올림픽에서 세계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

통일의 국제적 편익

통일한반도·중·일·러 동북아경제공동체 탄생

- 조선일보·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2040년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NAFTA, EU를 제치고 세계 1위 경제권으로 발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탄생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안보적 편익 :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

- 한반도 통일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

규범·문화적 편익

- 통일은 민주주의와 복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
-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사람, 물자, 문화가 융합되어 동아시아 신문화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될 것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통일 모의국무회의 정책 안건의 예 -

한-유럽간 대륙철도 증설 10개년 계획

백두산 관광 자원 개발단 선발 정책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의 평양 유엔사무국 운영 정책

동북아 농업시장 발전을 위한 농축산업 지원 정책 (제2회 수상 주제)

폐 군수 공장을 TCA(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제3회 수상 주제)

**정책 안건 선정이 모의국무회의 개최의 주축이 되며
정책 심의 및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근간을 이룹니다.**

TIP 5

현 정부의 주요 직책 부처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선정된 주요 정책에 합당한 부처를 선정하기 쉬워 집니다.

③ 직책 부처 설정하기 (국무위원)

- 구성된 팀의 인원과 국무회의에서 다룰 정책 주제가 결정되면 팀의 인원과 정책의 특성에 맞는 직책 부처들을 설정합니다.
- 팀 구성의 최소 단위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6개의 부처입니다.
- 부처는 기획재정부 / 국토부 / 통일부 / 법무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 국방부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해양수산부 / 미래창조과학부 / 안전행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등이며 직책 부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통일 이후의 상황이라면 직책 부처명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할 경우엔 현재의 부처 이름을 병기합니다.
- 중요도에 따라 현 부처의 업무를 분리하여 독립시키거나 신설 부처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TIP 6

팀원들의 성격과 재능을 고려하여 각각의 수행 직책을 결정하면 훨씬 흥미롭고 사실적인 모의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역할 나누기)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을 나눕니다.
- 각 정책 부처의 목적과 성격을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 영상, 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수행 직책의 임무를 표현합니다.

TIP 7

각자 발표할 정책을 안건으로 정리하면 토론 쟁점을 찾고 대본을 작성하는 데 용이합니다.

⑤ 담당 수행 직책별로 선정 주제에 대한 부처별 안건을 작성

- 선정한 주제의 주무부처는 간략히 모의국무회의의 안건을 작성합니다.
- 주무부처가 아닌 부처라도, 해당 안건에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그 부처의 입장까지 담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목차에 '유관부처 협의 결과' 등의 목차로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개의 안건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주무부처가 총괄하여 정리, 안건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 안건의 분량은 8~10페이지 이상으로, 통일 이전 혹은 통일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여 해당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정책추진 원칙 및 고려사항, 대응방안 등을 담습니다. 이 목차는 예시일 뿐, 자유롭게 작성하여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담으십시오.
- 작성한 안건은 대본에 '요약'으로 수록하여 (2페이지 내외) 함께 제출하십시오.

⑥ 부처간 토론 쟁점을 찾아내어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연관성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모색합니다.
-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구성합니다.
- 한 가지의 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이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직책 부처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객관적 사례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눈빛과 호소력 있는 제스처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⑦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안건에 대한 정책을 의결하기

- 각각의 부처별 의견과 주장, 갈등과 대립들을 유지시키면서 토의 안건에 대한 정책 결정을 도출하며 긍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 의결된 정책이 모의국무회의의 기본 목적과 세부 사항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통일된 구성을 기획합니다.

3. 대본 작성 요령

TIP 8

대본 전체 구성이 탄력적이어야만 모의국무회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①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 대본 작성을 위해 각 수행 직책별 의견과 주장을 취합합니다.
- 최대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개의 안건, 혹은 몇 개의 장면(Scene)으로 모의국무회의를 연출할 지를 토의합니다.
- 대본의 전체적인 흐름은 서론(정책 배경), 본론(정책 심의, 토론), 결론(정책 의결, 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 정책 주제의 도입, 정책 주제에 대한 부처별 토론,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별 갈등과 반론, 협의, 의결을 위한 대단원으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을 도출합니다.
- 기획 회의를 마무리하고 대본 작성을 시작합니다.

4. 통일교육원 발간 참고자료

모든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분	자료명	발간연도	주요내용	대상
기본교재	통일문제이해 (7장)	매년 발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남북관계의 전개, 통일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설명	교사 및 일반인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2011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재정립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 방안과 과제	2012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을 통해 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2012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관련 역사적 현상이나 상징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통일과 분단의 의미 조명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2011	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통일편익을 제시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09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야별 통합현황을 알아보고,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	
영상자료	대륙열차	2013	선조들이 독립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탔던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소개하고 통일은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제시하는 영상	고등학생 및 일반인
	통일 꼭 해야 되나요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비용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다양한 통일편익이 발생함을 설명	
	통일창업 위대한 벤처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비용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다양한 통일편익이 발생함을 설명	
	우리의 선택은 통일입니다.	2012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등을 설명하고 통일 미래 비전 및 통일에 가까워지는 방법 소개	
	분단에서 통일로	2012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 설명	
	통일, 미래를 위한 약속	2012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의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일 미래의 비전과 준비 과제 제시	
	세 친구의 1박 2일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를 1박 2일 형식으로 현장감 있게 설명	

5. 통일 모의국무회의 안건의 예

2015년~2019년 수상팀 안건

시행연도 /주제	팀명	안건
2015년 도약하라! 통일 10년 후의 대한민국	한맥	고구려 역사 문화단지 조성 계획 신의주 국제물류 산업도시화 추진
	UCC	백두산 화산재해 대응전략 한반도 북부지역 권역별 발전 전략
	북키스트	DMZ 평화 클러스터 형성, 실크로드 경제협력 기구 창설, 스마트 시티 구상
2016년 동북아 신 성장동력, 통일한국!	통통배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추진방안 백두대간 산악관광 진흥 구역 지정 계획
	UNI	아시아 육상 교통망 재생에너지 기반 확립(에너지 지급 계획)
	UNI-DRAW	DMZ 국립공원 조성, 문화교육개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SOC" 확충
2017년 통일,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U-ZEN	폐군수공장을 TCA(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D-light	동북아 메디컬 허브 구축 계획
	한울	한반도 서북부지역 실리콘밸리 개발 방안
2018년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쌍방통행 내일로	토지가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토지공사의 설치와 파생수 익의 공공적 사용
	고래	통일한국의 정의실현 불법구금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
	부처, hands up!	통일특별시 구축에 대한 안건 Uni-City Project
	통's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불릴 노래 남북 문화교육을 위한 "아리랑 계획"
2019년 평화와 번영의 통일한반도	도담도담	통일한국 스마트 E정책
	통성명	통일한국의 중부지역 개발계획: 오늘의 회복, 통일마을 조성사업
	한반도미래 연구회	동북아 번영을 위한 힘찬 도약 : 한반도 에너지 협력 기금법
	깨.맑.자.	한반도 방역협업본부 설치와 공동 방역 사업 방안

제 6회 통일 모이콧무회의 경연대회 걸라잡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반도!



II

제 6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II

제 6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주최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후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1. 목적 및 개요

통일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는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의 시기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키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축제의 마당이다. 이러한 모의국무회의의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학생 세대에서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면서 평화통일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키워나가고자 한다.

2. 시행 주제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반도!

3. 시행 내용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상황을 가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상을 상상하여 평가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시연한다.

- 참가 자격: 전국의 대학,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생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www.kaurinu.or.kr) 혹은 통일한국모의국무회의 카페(<http://cafe.daum.net/unifi2016>)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참가신청서(기획안과 팀 소개, 팀원 명단 포함), 모의국무회의의 대본(50분용)을 작성하여 kaurinu21c@gmail.com으로 메일 접수한다.
- 참가비 없음
- 팀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3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 수행 직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가운데 대통령 1인 포함 6개 부처 이상의 장관들이 각 부처별 의제와 정책들을 발표한다.
- 부처 선정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나 부처명의 경우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처 명을 현재의 부처 명과 병기한다.)
- 대본의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50분간의 국무회의 시연 내용으로 준비한다.

4. 시상 내역

최우수상 1팀 : 상금 300만원 및 통일부장관상

우수상 1팀 : 상금 200만원 및 통일교육원장상

장려상 2팀 : 상금 100만원 및 통일교육원장상

5. 심사 기준

소재의 참신성, 자료 준비 및 활용도, 미래통일정책에 대한 공헌도, 의사소통능력, 국무회의 목적 달성도, 자세 및 팀워크 등

6. 대회 일정

- 신청 접수 : 6월 1일 ~ 8월 21일 (오후 6시 이메일 신청 접수 종료)
- 서류 심사 : 8월 24일 ~ 8월 28일 (합격팀 개별 통보)
- 예선 : 9월 5일(토) 오후 1시30분 / 팀당 50분간 진행 (8개팀 경연 후 4개팀 선정)
- 결선 : 9월 중 추후 발표 / 팀당 15분간 발표 후 4개팀 정책토론 토너먼트 진행

7. 문의

전화 : 02-6053-2001 <제6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사무국>

전자우편 : kaurinu21c@gmail.com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unifi2016>

8. 예선 및 결선 상세일정

예선 (9월 5일 토요일)

장소 : 통일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일정	시간	내용	비고
9 / 5 (토)	13:30 ~ 13:50	예선 오리엔테이션 및 순서 추천	장소 : 대강당
	14:00 ~ 14:50	1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2개팀)	* 1개 조가 2개 팀으로 구성 * 1조~4조가 2곳의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경연 진행 (총 8개 팀)
	15:00 ~ 15:50	2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2개팀)	
	16:00 ~ 16:50	3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2개팀)	
	17:00 ~ 17:50	4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2개팀)	
	17:50 ~	* 심사위원 평가 취합 및 협의, * 심사위원 A조(3명)에서 1,2위 팀 선발 / 심사위원 B조(3명)에서 1,2위 팀 선발 총 4개 팀이 결선에 진출	

결선 (9월 중 추후 공지)

장소 : 남북회담본부

일정	시간	내용		장소
9월 중 (추후 공지)	13:00 ~ 13:30	개회식 및 결선 오리엔테이션		
	13:30~ 14:30	1부 (정책발표)	정책 발표	A·B·C·D 팀 15분씩 정책 발표 (발표 방식 : 대통령 모두발언-각 정책부처 발언- 의결된 정책에 대한 총론)
	14:40~ 15:40	2부 (정책토론 및 검증)	팀 간 지정공격 및 방어 (15분)	각 팀 대표(3명씩) 출전, 상대 팀 발표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대응 (해당 팀 순서에는 나머지 3개 팀이 질의하며, 해당 팀은 그에 따른 반론 및 대응한다.)
			작전 타임 (2분)	팀 의견 정비 및 자유 토론 전략 수립
			자유공격 및 방어 (20분)	각 팀 대표 전원 자유논쟁 상대 정책의 오류 및 허점 공격,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대응 및 방어
			방청객 QnA (5분)	방청객이 토론에 참여하여 결선 팀에게 질의문답
			작전 타임 (2분)	팀의 최종 변론 정리를 위한 준비
			최종 변론 (10분)	상대 팀에 대한 반론 포함, 자신의 팀에 대한 강점 및 타당성 전달, 감성에 호소할 수도 있는 스피치 능력 표출
	15:40~ 16:00	심사 협의		
	16:00 ~ 16:30	심사 발표 및 시상		

9. 참가신청서 양식

제6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참가신청서

1. 팀 소개 및 팀 대표 인적사항

팀명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명)
팀 소개	(300자 내외)

팀장 성명		생년월일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2.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 기획서

<경연주제>

<p>* 모의국무회의의 참여 동기와 경연주제, 문제의식과 기획의도 그리고 경연에서 발표할 주요정책 등을 기술 * 필요시 자유 형식으로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사용 시 주제만 기술 후 A4용지 2매 이내로 별도 문서 파일을 첨부</p>
--

위와 같이 제6회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귀중

3. 팀원 명단 및 정보

No.	이름	학교 및 학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역할 부처 (부처명 변경시 현행 부처명 병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제 6회 통일 모이콧무회의 경연대회 걸라잡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반도!

III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기획안 및 대본 예시 (제 5회 수상작)

1. 기획안 예시

통일한국 스마트 E 정책

제 5회 최우수상 팀
도담도담

I. 참여 동기 및 문제의식

2017년, 2018년, 2019년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동시대 동지역의 것이라는 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고 극적으로 변화해 왔다. 여러 희망 섞인 전망들과 비관적인 견해들이 제시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 우리에게 북한은 더 이상 밀실 안의 적이 아니라, 적어도 대화를 시도할 수 있고 때로는 같이 웃을 수도 있는 대상이란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무엇인가 공유할 수 있고, 어쩌면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었던 통일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세대라는 자각은 최근의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과 남북관계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는, 나름의 위치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국가 정상들이 만나 외교전을 펼치는 것도 통일을 위한 준비이지만, 실제 통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보다 중요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일이 개개인 국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가? 통일한국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민생 이슈들이 많겠지만, 그 중 에너지와 전력 공급 문제는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의식에서 모의국무회의의 참여와 논의 할 정책 주제를 결정했다.

II. 추진배경과 정책 목표

1. 통일한국에 적합한 에너지·전력 체계의 필요성

- 안정적인 에너지와 전력산업 체계는 국가의 산업, 상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요소로 통일한국이 해결해야 할 급선무의 과제
- 기존 남북한에서의 에너지·전력 체계의 결함: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생산 관리에 부적합
- 환경, 지속가능성 연관. 국제정세와 미래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
-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은 대량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전제해야 함

2.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 인한 새로운 에너지·전력 체계의 가능성

- 전력생산과 소비 정보의 양방향 교환으로 특히 에너지의 소규모 생산, 소비에 효율 높임
- 분산화된 전력 생산 및 공급 구조의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대두

- 근 몇 년 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기술확산점 도달 예상
-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 공급 부문에서의 혁신 필요

3. 정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에너지/전력 분야의 핵심적 가치들

- 전력 시장 효율성, 지속가능한 발전, 국토균형발전, 안정적 전력 공급

III. 전력 생산에서의 혁신 - <신기한> 정책

1. 정책 목표

- 전력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다양화, 특히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 기업의 참여 독려

2. 기대 효과

- 신재생에너지의 소규모 단거리 소비 구조와 경쟁 시장에서의 유연한 수요 예측의 정합성
- 에너지 생산 기업의 기술력 발전 및 생산성 증가 독려, 중소 기업 등 국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 에너지, 전력 산업에서의 잠재성 활용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 촉진
- 개발 수준이 낮은 통일 이전 북한 지역에서의 높은 잠재력과 생산성 차이에 의한 균형개발 가능성
- 기업과 지역별 주민과의 연결 독려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

3. 실현 방안

-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제도 SEG, FiT의 절충적 활용
- 지역주민할당제의 도입을 통한 부가적 일자리 창출 및 균형 발전 효과

<신기한> 정책	
신재생에너지 성장, 기업 성장, 한반도 에너지 산업 성장	
쟁점	대답 및 절충안
(1) SEG 제도 vs. FiT 제도 기업의 진입장벽 낮추기 위한 제도는?	(1) 단기적으로 FiT, 점진적으로 SEG로 전환
(2) 국토균형발전 기여 여부	(2) 지역적 특성에 의한 한계 생산성 차이가 기업들의 지리적 분산 유도할 것. 지역주민할당제 등 일자리 정책도 고려.

IV. 전력 공급에서의 혁신 - <3지> 정책

1. 정책 목표

- 시장형 공기업 도입을 통한 제한적 자유화

2.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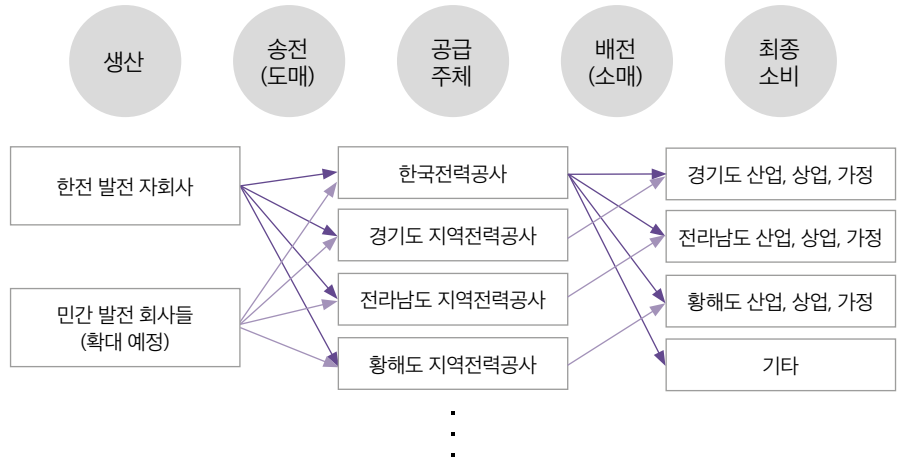
- 지역 거점형 스마트그리드 방식의 도입의 전제로서 새로운 기술과의 효율적 접합
-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따른 소규모 단거리 공급에 적합한 구조 확립
- 독점적 유통 체제에서의 비효율적 운영 극복

3. 실현 방안

- 완전민영화와 기존 체제와의 절충점으로서 시장형 공기업의 설립
- 공급 관리 주체로서의 지방전력공사의 역할에 의한 국토균형개발
-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공급 주체들의 효율적 운영

<3지> 정책	
지역균형, 지속가능, 지방공사	
쟁점	대답 및 절충안
(1) 완전 민영화 vs. 제한적 자유화	(1) 다수의 '시장형 공기업' '경쟁→효율'과 '공기업→안정성' 모두 행기는, 그 자체로 절충안.
(2) 환경과 지속가능성 기여 여부	(2) 신재생에너지는 소규모 근거리 에너지원 적합도: 지방전력공사 > 중앙전력공사

별첨) 통일한국 전련산업 벨류 체인(가상)



2. 대본 예시 1

통일한국 스마트 E 정책

제 5회 최우수상 팀
도담도담

#Chapter 1 국무회의 개최 선언

대통령

2030년 4월 22일, 구성원 15명 중 8명의 출석으로 개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제5회 국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땅! 땅! 땅! 두드린다.)

국무총리

통일 한국 의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정치적 통일을 넘어서서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의미에서 다 같이 '우리의 소원'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 노래 제창하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국무총리

모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 금일 국무회의 소집의 취지와 논의 방향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Chapter 2

대통령 모두 발언 및 안건 논의

대통령

금일 상정된 국무회의 제출의안은 「국무회의규정(대통령령)」제5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차관회의를 통해 사전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오늘 주요 안건은 ‘통일한국 스마트 E 정책’이죠? (국무총리를 보며) 오늘 논의해야 할 구체적 안건에 대해 국무총리님께서 간단한 브리핑을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2030년 현재 우리는 정치적 통일을 이룩하여 통일한국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들, 같이 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제는 정치적 통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통일은 통일의 결론이 아닌, 서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 통일을 완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임박한 정책 과제들이 있지만, 우리 통일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는 에너지와 전력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은 모든 국민의 삶과 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당장 통일한국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SDGs 목표 그림을 보여주며) 올해 2030년까지 시행되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제7목표 또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에너지와 전력은 통일한국이 다루어야 할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중대한 과제입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의 통일을 위해서는 전력 생산과 공급, 전력망과 송배전, 그리고 도매와 소매에 있어 통일적이고 안정적인 일관적 전력 구조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통일한국의 전력 구조 개편 과제는 과거 북한과 남한의 전력 구조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과거 북한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부가결한 요소입니다. (OECD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추세 그림을 보여주며) 국제적 추세를 보았을 때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모든 OECD국가에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화면의 자료를 가리키며)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력 생산은 수력 발전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별첨1 지속가능발전 제7목표

별첨2 OECD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추세

별첨3 과거 북한 지역 발전설비용량 추세

따라서 과거 북한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국제적 기준에 비해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이는 통일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했을 때 구조적 개편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장관님들 한 때 남한지역에 있었던 블랙아웃을 기억하시지요?

모두

(절레절레, 웅성웅성) 네~~

국무총리

과거 남한에서의 절대적 전력 생산량 및 생산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하였지만, 그 구조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간헐적으로 발생한 블랙아웃 사태는 국민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의심하게 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과 민영화 추진 논의는 정부 밖에서 뿐 아니라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요구에 의해 에너지원이 다양화되었고, 과거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지 않았던 북한 지역에도 전력 공급이 필요한 지금, 통일을 기회로 삼아 과거 남북한의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체계가 요구됩니다.

통일 정부가 직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기에 앞서, 정책의 기술적 바탕이자 전력망 구축의 표준이 되는 신기술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보며) 장관님?

#Chapter 3

정책의 기술적 배경
: 스마트 그리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개를 살짝 끄덕인 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통일한국이 직면한 전력 생산 및 공급에서의 문제는 구조적 혁신과 신기술의 도입을 필요로 합니다. 신기술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의 구조적 혁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말 그대로 똑똑한 전력망이라는 뜻이겠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기존 전력망에 ICT 기술을 더해 전력생산과 소비 정보를 양방향,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입니

별첨6 마이크로 그리드 모식도

별첨7 중앙집중형 전원과 분산 전원

별첨8 과거 북한 정부의 재생 에너지를 법제

별첨9 과거 북한 지역 총 발전량 추세

다. (전력 생산 체계에서 전력 예비율을 보여주며) 기존 전력망은 최대 수요량에 맞춰 예비율을 두고 일반적으로 예상 수요보다 15%정도 많이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존 전력망은 중앙집중형, 공급자 중심의 설비운영으로 화석연료를 통한 대규모 발전이 발전 방식의 핵심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며) 반면 스마트 그리드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전기 수요량을 예측하고, 기존 일방적인 관계의 수동적 소비자였던 가정들은 이제 능동적으로 시간별 전력 가격을 확인하고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기술확산점은 이미 2024년 당시 남한에서 달성되었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 이 말도 들어보셨죠? 마이크로그리드는 뭘까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하부에 있는 것이 마이크로그리드입니다. (마이크로그리드 모식도를 보여주며) 마이크로그리드란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소규모 네트워크를 말하는데 아파트라면 단지별로, 마을이라면 마을별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송전 손실을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발전소의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 체계가 활성화된다면 지역에 맞춰 일조량이 높은 지역은 태양광을,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가에는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중앙집중형 전원과 분산전원' 그림 제시) 기존 남한지역에서 사용되던 중앙집중형 전원시스템 대신 분산전원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즉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송전 시 전력 손실을 줄임으로써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협력지원부 장관

(손을 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눈짓으로 발언권 부여) 그렇다면 이 기술이 통일한국에 적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거 북한 정부의 재생 에너지를 법제를 보여주며) 과거 북한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과거 북한 지역 총 발전량 추세를 보여주며) 실제로 90년대 이후로 수력 발전이 실제 발전 총량에서 50% 이상을 차지해 왔으며, 전력 부족의 상황 시 세대별로 독자적인 발전기와 전력저장 장치를 갖추게 할 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북한에는 중앙집권적 전력망이 아닌, 지역 단위의 전력망에 기반한 시스템, 즉 일종의 마이크로그리드 체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통일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체계 구축에 유리한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력 생산량을 늘리는 통일 한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군요.

행정안전부 장관

동의합니다. 오늘날 각광받는 기술 추세를 따라 남북한 통합 스마트 그리드가 형성된다면 이는 동북아 슈퍼 그리드로도 이어질 수 있겠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일 한국에 이 체계를 한 번에 전면 도입할 수 있나요? 또,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고정되어있지 않아서, 대규모 정전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네,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해 답해드리자면 통일 한국에서 역시 스마트 그리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거점을 기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제주도, 원산에서의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통한 거점 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현재 기술적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형성된 북한의 마이크로그리드를 파악한 후 이를 스마트 그리드 체계로 연결하는 단계적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국무총리

지금까지 현재 통일한국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전력 구조의 문제점과 이를 둘러싼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배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통일 한국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그에 적합한 구조적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적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문제를 대할 때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네 가지 정책적 기초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전력 생산과 공급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과 분배를 추구한다.

둘째,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국가기반산업인 에너지 생산의 지리적, 정치적 분산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한다.

넷째, 국민 후생과 불가분의 관계인 전력 공급의 장기적 안정을 달성한다.

이에 따라, 본 회의에서는 위의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위해 추진할 정책으로 <통일한국 스마트 E 정책> 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 정책 목표로서 <신기한> 정책과 <3지> 정책을 다룰 것입니다. 정책이 굉장히 신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웃으며) 기획재정부 장관님, <신기한> 정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Chapter 4

전력 생산에 대한 논의
: 생산 주체 다양성을 위한
'신기한' 정책

기획재정부 장관

네, 국무총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기한>은 '신재생에너지 성장, 기업 성장, 한반도 에너지 산업 성장'이라는 뜻인데요. 과거 남한의 전력 생산은 한국 전력공사의 자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몇몇 민간기업의 전력 생산도 있었으나, 그 절대량은 미비했으며 대기업 위주의 참여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우선 그 문제로 현재의 체제는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불리합니다. 한전의 자회사들은 기존에 해 오던 것처럼 주로 유연탄을 이용한 석탄화력 발전을 하거나 원자력 발전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에너지원의 특성이 대규모 생산과 낮은 발전단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내외적 요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요청합니다. 과거 남한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고자 했으며, 과거 북한 정부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둘째, 기업 참여가 미비합니다. 이미 말씀 드렸 듯 과거 남한의 에너지 발전은 주로 공기업이 해 왔으며, 북한은 당연히 기업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생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적자를 껴안으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발전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며, 국가 산업과 기업 성장,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신기한> 정책의 핵심은 '전력 생산에서 참여 주체의 다양화'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설명하겠습니다. '참여 주체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전의 자회사들뿐만 아니라 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높은 초기 비용 및 운영 비용을 요구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장의 특성상 성장 단계의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술은 갖추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 회사들에 대해 잠정적인 재정적 '특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초기비용과 운영비용 각각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장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해 중소기업들에게 당장 필요한 초기 비용 50%는 대출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대출 형태이므로 생산 후 이익의 5%는 이자로서 함께 환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은 초기 5년 동안 SEG (Smart Export Guarantee) 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SEG란 생산 전력 중 회사들이 소비한 전력량을 제외한, 실제 판매 전력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을 5년으로 산정하고, 그 기간동안의 판매 전력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 구조에서의 혁신 즉, 전력 생산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생산 주체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면 크게 3가지 측면에서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효과가 바로 신, 기, 한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같이 운을 띄워주세요. 먼저~

모두

신! (모두, 소리 내어 효과음을 낸다. 빠밤.)

기획재정부 장관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면적 도입에 유리합니다. 앞서 국무총리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다양한 협약과 규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소개해주신 스마트 그리드는 이와 같은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한국에서의 전력생산은 신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 집중형 생산 구조에서는 변화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우며, 신재생에너지의 소규모 생산의 특성상 요구되는 분산적 생산의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기업에 투자 재원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쟁이 있어야만 기술 개발의 속도, 시장 확장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과 경쟁 두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신재생에너지 사용화가 가능한 환경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모두

기! (모두, 소리 내어 효과음을 낸다. 빠밤)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의 성장’입니다.

생산 주체 간의 경쟁을 통해 여러 기업들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가속화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실패를 겪었지만, ‘구조적, 기술적 혁신’을 통해 그 실패를 딛고 극복한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성장과 동반되는 기술력의 성장을 등에 업고 한국 산업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한! (모두, 소리 내어 효과음을 낸다. 빠밤)

기획재정부 장관

‘한반도 에너지 산업의 성장’입니다.

에너지 생산 산업은 통일 이후 더욱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이에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진입하였을 때 성장 동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 이전 남한에서는 생산된 전력을 수출하여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시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진 국

내 전기를 수출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산업 시장의 발전 및 확대는 통일 이전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차이를 지리적 구분에 따른 일반적인 원조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자생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다양한 정책들에서 중요시되는 가치인 ‘상생’을 실현할 것입니다.

#Chapter 5

생산에서의 경쟁 원리 도입 측면에서 ‘신기한’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질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을 들고, 기재부 장관은 발언권 부여)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발제하신 정책 전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 한 박자 쉬고) 다만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경쟁 원리를 도입하려면, 제시하신 정책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본이 비교적 부족한 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SEG 제도보다는 FiT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 장관

FiT 제도와 SEG 제도의 차이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별첨10 FiT와 SEG 제도 비교

(여기서 FiT와 SEG 제도 비교하는 자료를 가리키며)

SEG제도는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판매 전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이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초기 운영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FiT 제도는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발전 설비에 드는 초기 운영 비용 모두를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제시해 주신대로 운영비용이 안정화되는 기간을 5년으로 간주하고, 최소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운영비용 전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중소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첫 번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 first loss provision, 즉 초기손실보상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특히 신생 기업의 경우, 실무적 경험이 부족해서 잠정적 손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첫번째 손실액에 대한 전폭 지원을 한다면, 기존 기업과 신생 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들 모두 부담이 줄고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수정하신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 데, 현실적으로 FiT는 점차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숙하고, 매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한 정부 및 전력 판매회사들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상 조금 부담스러워 질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절충적으로 초기 안정적인 에너지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FiT 제도를 도입하되, 점진적으로 FiT에서 SEG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 제시해주신 초기 손실 보상(First Loss Provision) 제도는 중소기업벤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자 진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업의 경쟁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저희 부처의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신기한’ 정책에 ‘초기 FiT에서 점진적 SEG의 절충적 방안과 초기 손실 보상(First loss provision)’을 합한 것으로 수정안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음, (고민하는 모습)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만 한 절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체적 정책 제정 시에는 중소기업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국무위원 분 계십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대통령

그렇다면 전력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을 받는 기업을 심의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획재정부 장관

물론, 정부가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기업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려 합니다. 심의 기준은 다음 두 가지와 같습니다. 1.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O&M 비용 계획(충분히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의 실현 가능성과 계획 구체성) 2. 신재생 에너지 생산 사업 경제성 평가 (비전)입니다. 국가 차원의 큰 사업인 만큼 엄격한 심의 절차를 통해 공정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심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투명성 있게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Chapter 6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신기한'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질의

행정안전부 장관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 장관

앞서 이 정책에서의 중요한 목표인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려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인 자유화 및 참여 주체 다양화가 어떻게 통일한국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은 지적 감사합니다. 답변해드리죠. 요약하자면, 한계생산성의 차이가 기업들의 지리적 분산을 이끌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통일 북한 지역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은 풍력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사업을 집중 실시해왔으며, 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해왔습니다.

약 25여년 전인 2006년부터 북한과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을 해 온 스위스 NGO CFC는 황해북도 지역에 300W와 2k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각각 1대씩 설치한 후 그 효과가 매우 좋아 2kW의 풍력발전기를 2009년 7월 추가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의 조력발전 잠재량은 약 4,700MW로 추정됩니다. 조력 발전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해 남포 조력발전소를 설계하였으나 비용문제로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과거 북한 지역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통일 정부의 지원이 보장된다면, 결국 주체의 다양화, 민간기업의 참여 기회 증가 자체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이어져, 이전에 잠재성을 가지고 있던 국토의 각지에서 균형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통일협력지원부 장관

조금 부차적인 이야기겠지만,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전력량이 증대되고 다양한 주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아무래도 에너지 산업이 더 각광받을 것입니다. 이로 파생되는 일자리는 통일 한국의 지역주민할당제로 충당하면 어떨까요? 지역주민할당제는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나아가서 전반적인 통일 한국의 국토균형발

전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앞에서 소개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경우 소규모 전력생산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기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역주민할당제는 이와 같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네, 아주 열띤 논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나 추가할 부분 있나요?

모두

없습니다~

국무총리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7

전력 공급에 대한 논의
: 공급 주체 이원화를 위한
'3지' 정책 배경 설명

국무총리

지금까지 전력 생산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생산된 전력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공급할 지인데요, 공급과 관련한 정책 제안 또한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이 <3지> 정책인데요. 먼저 통일협력 지원부장관님, 발의 부탁드립니다.

통일협력지원부 장관

통일협력지원부 장관입니다. 차관회의 결과, 저희부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공급 정책인 <3지> 정책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지는 지역 균형, 지속가능, 지방공사입니다. 정책 제안의 배경이 되는 현행 공급체계와 이것의 문제점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거 남한 지역의 전력 공급체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판매 및 송배전 시설의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공급체계를 통일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력 공급 차원에서의 국토불균형 문제입니다. 본 회의에서 통일한국 전력 구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스마트 그리드라는 기술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미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전력 격차를 줄이고 국토균형적인 전력 공급을 하는 최선의 방안은 ‘지역 거점형 스마트 그리드’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원격 화상 회의 시스템 가동 후) 나와 주시죠?

통일과학기술연구원장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어? (이후 다 같이 놀라며 “어?”)

통일협력지원부 장관

네 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통일과학기술연구원장 (원격)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과학기술연구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판석이라고 합니다. 지역 거점형 스마트 그리드 체계란 스마트 그리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이를 구축하기 용이한 거점을 기반으로 전력망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체계입니다. 결국 전국적인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추구하되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남한에서의 전력 공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은 ‘스마트 그리드 체계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거점도시에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전국의 공급을 운영하게 되는데, 중앙에서 이를 모두 관리하다보면 거점도시 주변 지역의 소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 남한의 정부 주도의 지역 거점 도시 개발 방식이 거점 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소외를 낳은 것처럼 말이죠. 정리하자면,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거점도시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통일협력지원부 장관

감사합니다. 그럼,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관리 측면의 문제입니다. 향후 전력 생산은 소규모 근거리 전력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며, 그것이 우리 통일 정부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판석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통일과학기술연구원장 (원격)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력 공급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체제는 유연탄이나 원자력 발전과 같은 대규모 원거리 전력원을 공급하는데에 적합했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근거리 전력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역적이고 분권화된 체계가 요구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지역의 특수한 지리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 특수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데에 과연 기존의 체계가 효과적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원격 화면은 꺼진다.)

통일협력지원부 장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셋째, 과거 독점적 공급체계 하에서는 독점에 의한 시장에서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여러 전력 생산자들이 발전한 전력을 사들이는 주체가 한국전력공사 하나 뿐이라면, 전력의 도매가격이 단일 공기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보다 시장화된 환경과 비교해 민간발전사가 참여할 유인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단독으로 사들인 전력을 소매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전부터 정부 내외에서 한전 민영화를 통한 독점의 모순 해결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온 만큼, 통일협력지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일한국의 새로운 전력 공급 체계를 설정하는 <3지>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Chapter 8

'3지' 정책 발의 및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감사합니다, 장관님. 통일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저희는 과거 남한의 전력공급 뿐 아니라 북한의 체계도 검토했습니다. 과거 북한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공급하는 구조의 전력산업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가적 전력 공급체계가 부문별, 지역별 자체공급 체제로 변화하는 추세였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절대적 전력생산량이 적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통일한국의 전력공급 체계는 과거 북한의 체계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Gee~Gee~Gee~ “3지” 정책입니다. 3지 정책의 핵심은 지방전력공사의 설립입니다. 즉, 통일 이전 남한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던 한국전력공사를 유지하되, 통일 한국의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3지 즉, 지방전력 공사의 참여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지역균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PPT에 도표: 통일한국 전력 산업 밸류체인 (가상) 제시하며)

이제 정책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전력공사는 판매 부분과 중계 부분에 개입하게 됩니다. 먼저, 판매의 측면에서 다수의 지방전력공사들이 중앙의 한국전력공사와 더불어 전력의 도매, 중개, 소매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즉, 전력 생산주체들은 한국전력공사 이외의 공사들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최종소비자는 한국전력 이외 자신이 속한 지방전력공사의 전력 또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중계 부분에서도 기존에 한국전력이 전국의 송·배전 시설을 독점했던 것과는 달리 지방전력공사들도 각 지역의 송·배전 시설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과거 북한 지역의 송배전 인프라 확충에 있어 지방전력공사도 참여하게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별첨11 통일한국 전력 산업 밸류체인 (가상)

대통령

전력의 판매 및 중계에서 지방전력공사라는 새로운 주체를 참여시키자는 거군요. 그래서 이 정책이, 앞서 통일협력지원부 장관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대통령님.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집권적이던 기존의 전력 공급 체계를 지방분권화 시켜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전력공사는 스마트 그리드 거점 도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스마트 그리드 체계의 전국적 확산’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에 있어 생산과 공급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근거리 전력원인 재생에너지의 생산 유도와 공급 활성화에 있어 지방전력공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단위 중소 전력 생산 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개인 프로슈머들과 보다 가까워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전력공사는 지역 주민 및 지역 기업에 친화적입니다. 또한 전력 수요 예측, 에너지 믹스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전력공사는 지역 특수성에 맞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셋째, 시장 공기업을 통한 전력시장의 제한적 자유화 정책은 기존 남한의 한국전력공사 독점 체제의 비효율을 완화합니다. 전력 송배전에 있어 각 지역의 지방전력공사와 한전이 경쟁하는 체제는 하나의 공기업이 생산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독점하고 있던 기존 체제의 문제들을 완화할 것입니다. 비효율의 시장화는 시장논리에 의한 유연한 가격 조정,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일본, EU 등 많은 에너지 선진국들의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은 앞으로 에너지 강국이 될 통일한국에도 갖는 함의가 큼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아 네, 감사합니다. 또 할 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손들며, 다급하게) 아 저...!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다.

국무총리

(당황한 목소리로)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지" 정책, 통일한국의 새로운 출발"지"네요!

모두

(잠깐 머뭇하며 기계적인 박수를 친다.) ...하하하..!!

#Chapter 9

3지' 정책 중 민영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질의

대통령

두 장관님께 (잠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그시 쳐다본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통일한국의 국민들이 당장 어떻게 생활할지 직결된 것 뿐 아니라, 실질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정책 같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봤으면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손을 든 것을 보고) 네, 기획재정부 장관님.

기획재정부 장관

두 장관님의 정책 발의, 잘 들었습니다. 통일 통일한국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에너지 공급 안정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독점의 모순과 민영화와 관련하여, 전력 공급의 제한적 자유화보다는 완전 민영화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 등 외국의 사례만 봐도 지금까지 이미 전력공급의 민영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2016년에 전기소매시장을 개방하면서 시장의 경쟁에 의해 기존에는 없었던 맞춤형 전력 상품이 등장하며 연간 가구당 5,000엔의 전기 가격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통일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완전 민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제한적 자유화의 방향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감사합니다 장관님. 장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의한 본 정책은 안정성의 측면에서 공기업 유지를 통한 제한적 자유화가 통일 한국에는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민영화 논란에서,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유통 과정에서 전력 거래소, 송전 사업자, 배전 사업자 등 중간 유통자들이 늘어나며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민영화로 인해 에너지 공급이 줄고, 결국에는 전기료의 인상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전력은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안정성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북한 지역은 아직 시장원리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였고 전력 공급의 기반을 갖춘 기업들이 많지 않기에, 완전 민영화는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쟁을 도입하는 자유화의 장점은 수용하면서도, 공기업이 주체로 참여하여 극단적인 상황을 막는 것, 그 해답이 시장형 공기업에 의한 제한적 자유화입니다. 만약 지방공사 혹은 한국전력공사 어느 한 쪽에서 공급의 문제가 생겨 가격 폭등 등 긴급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다른 쪽의 공기업이 자리하고 있기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 장관 이 손을 든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님 질의 해 주세요.

#Chapter 10

'3지' 정책 중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질의

행정안전부 장관

우리 통일정부가 목표하는 바,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가 지속가능성이라고 앞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의해 주신 내용은 기존 전력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여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고 이해했습니다. 반면 이 정책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회원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 본부가 위치한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이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 저희는 정책을 통해 통일한국의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단지 정부가 정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 친화적인 전력 체계의 구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들은 대부분 석탄화력과 원자력 에너지 발전에 치중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전력공사의 공급 방식과 무관하지 않은데, 중앙에서 대규모 에너지를 원거리로 공급하기에 적합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경우 근본적으로 소규모 근거리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소규모 근거리 전력원인 재생에너지의 생산 유도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전력공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중앙에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에너지산업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면, 지방마다 독립적인 자체 전력 공사를 설치하여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여러 주체들의 참여 유도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규모 전력 생산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은 이와 같은 공급 방식이 더욱 적절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Chapter 11 마무리 발언 및 의결

대통령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조용) 없으시다면 이제 오늘 의 안건, <통일한국 스마트 E 정책>에 관한 논의 사항과 세부 정책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통일한국 스마트 E 정책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의 생산과 공급,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균형잡힌 국토 개발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과 함께 등장한 기술적 가능성을 반영하는 구조적 혁신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의 특징에 따라, 생산과 공급의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생산 측면의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생산과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신기한> 정책입니다. 본 정책은 다양한 주체의 경쟁적 에너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그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초기 비용 일정량과 초기 손실 비용 지원 및 운영 비용 지원의 FiT에서 SEG로의 점진적 전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공급 측면의 정책은 국토균형개발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3지> 정책으로, 시장형 공기기업의 도입을 통한 제한적 공급 자유화를 그 골자로 합니다.

이상의 논의를 거쳐 종합한 <신기한> 정책의 수정안과 <3지> 정책의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신기한> 정책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책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손 든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 들지 않는다) 만장일치로 <신기한> 정책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지> 정책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책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손 든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3지> 정책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이상으로 본 회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국무위원님들과 배석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박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 잠깐 잠깐! (이목이 집중된다.) 끝나고 다들 뭐하세요? 이렇게 유쾌한 날 육회 한 접시나 드시러 가시죠!

국무총리

(웃으며, 한숨) 아, 장관님, 좀 그만하세요.

대통령

하하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치며 마무리한다.)

대본 요약

I. 추진배경과 정책 목표

1. 통일한국에 적합한 에너지·전력 체계의 필요성

- 안정적인 에너지와 에너지와 전력산업 체계는 국가의 산업, 상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요소로 통일한국이 해결해야 할 급선무의 과제
- 기존 남북한에서의 에너지·전력 체계의 결함: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생산 관리에 부적합
- 환경, 지속가능성 연관: 국제정세와 미래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
-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은 대량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전제해야 함

2.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 인한 새로운 에너지·전력 체계의 가능성

-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의 양방향 교환으로 특히 에너지의 소규모 생산, 소비에 효율 높임
- 분산화된 전력 생산 및 공급 구조의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대두
- 근 몇 년 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기술확산점 도달 예상
-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 공급 부문에서의 혁신 필요

3. 정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에너지/전력 분야의 핵심적 가치들

- 전력 시장 효율성, 지속가능한 발전, 국토균형발전, 안정적 전력 공급

II. 전력 생산에서의 혁신 - <신기한> 정책

1. 정책 목표

- 전력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다양화, 특히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의 참여 독려

2. 기대 효과

- 신재생에너지의 소규모 단거리 소비 구조와 경쟁 시장에서의 유연한 수요 예측의 정합성
- 에너지 생산 기업의 기술력 발전 및 생산성 증가 독려, 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 에너지, 전력 산업에서의 잠재성 활용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 촉진
- 개발 수준이 낮은 통일 이전 북한 지역에서의 높은 잠재력과 생산성 차이에 의한 균형개발 가능성
- 기업과 지역별 주민과의 연결 독려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

3. 실현 방안

-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제도 SEG, FiT의 절충적 활용
- 지역주민할당제의 도입을 통한 부가적 일자리 창출 및 균형 발전 효과

<신기한> 정책	
신재생에너지 성장, 기업 성장, 한반도 에너지 산업 성장	
쟁점	대답 및 절충안
(1) SEG 제도 vs. FiT 제도 기업의 진입장벽 낮추기 위한 제도는?	(1) 단기적으로 FIT, 점진적으로 SEG로 전환
(2) 국토균형발전 기여 여부	(2) 지역적 특성에 의한 한계 생산성 차이가 기업들의 지리적 분산 유도할 것. 지역주민할당제 등 일자리 정책도 고려.

III. 전력 공급에서의 혁신 - <3지> 정책

1. 정책 목표

- 시장형 공기업 도입을 통한 제한적 자유화

2.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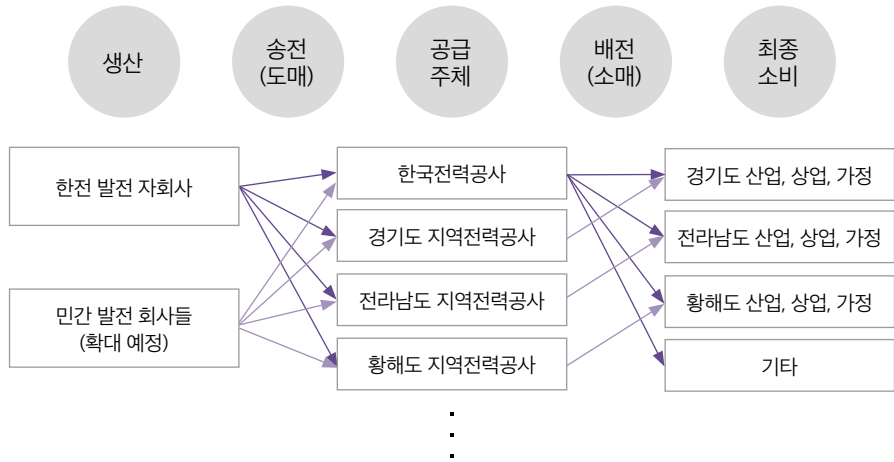
- 지역 거점형 스마트그리드 방식의 도입의 전제로서 새로운 기술과의 효율적 접합
-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따른 소규모 단거리 공급에 적합한 구조 확립
- 독점적 유통 체제에서의 비효율적 운영 극

3. 실현 방안

- 완전 민영화와 기존 체제와의 절충점으로서 시장형 공기업의 설립
- 공급 관리 주체로서의 지방전력공사의 역할에 의한 국토균형개발
-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공급 주체들의 효율적 운영

<3지> 정책	
지역균형, 지속가능, 지방공사	
쟁점	대답 및 절충안
(1) 완전 민영화 vs. 제한적 자유화	(1) 다수의 '시장형 공기업' '경쟁→효율'과 '공기업→안정성' 모두 챙기는, 그 자체로 절충안.
(2) 환경과 지속가능성 기여 여부	(2) 신재생에너지는 소규모 근거리 에너지원 적합도: 지방전력공사 > 중앙전력공사

별첨) 통일한국 전련산업 벨류 체인(가상)



IV. 유관부처 토의사항

유관부처	주요논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일 이전 남한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던 한국전력공사를 유지하되, 통일한국의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2. 지방전력공사는 판매 부분과 중계 부분에 개입하여 최종 소비자는 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지방전력공사의 전력 또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한다. 3. '3지' 정책은 전력 공급체계 분산을 통한 지방분권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연계, 제한적 자유화를 통한 독점 체제의 비효율 완화라는 효과를 가져 통일한국 에너지 정책의 기초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기획재정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한' 정책은 전력 생산에서 참여 주체의 다양화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기업의 성장, 한반도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2. 일정기간 동안은 FiT를 도입하되, 점진적으로 FiT에서 SEG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초기 손실 보상제도(First Loss Provision)을 통해 다양한 기업의 경쟁 활성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p>행정안전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 그리드 체계 구축이 최종적인 지향점이 되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스마트 그리드 체계의 도입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만 한다. 2. 기존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 전력 생산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불리, 기업 참여가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3.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측면도 공급 체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p>과학기술 정보통신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적 배경으로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도입은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현실이다. 2. 북한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기반이 잘 형성된 상태이며 거점 기반 스마트 그리드 체계로 연결하는 단계적 과정을 거칠 것이다. 3. 스마트 그리드로의 전환 상황에서 기존 한국전력공사의 공급 방식은 비효율적이기에 지방 공사를 도입해야한다.
<p>중소벤처기업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SEG 제도보다는 FIT 발 전차액지원제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전력 생산 참여를 유도한다면 이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중요한 문제이다.
<p>통일협력지원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산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파생되는 일자리는 통일 한국의 지역주민할당제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 2. 기존 독점적 공급체계를 통일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토불균형,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리 측면, 시장에서의 비효율 문제를 낳기에 <3지> 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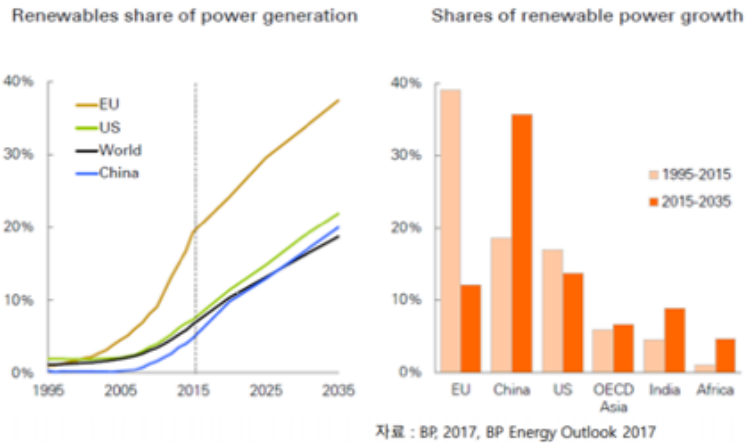
별도 자료 첨부

<별첨 1 : 지속가능발전 제7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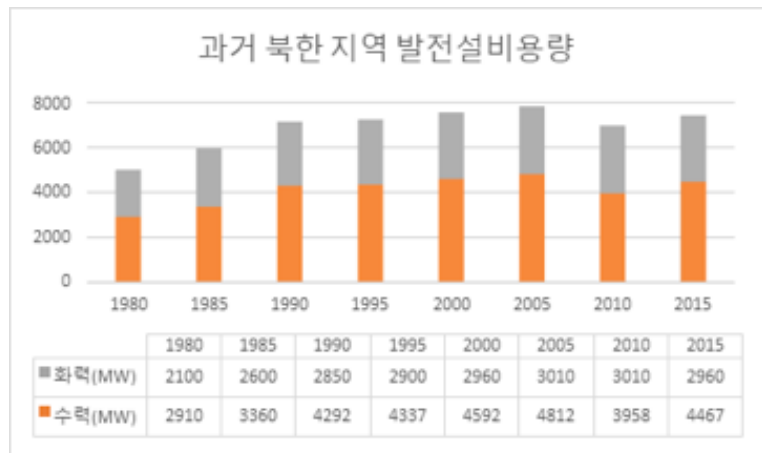
- Does your business model use clean, renewable energy sources?
- Do you consider energy auto-sufficiency?
- Do you collaborate with our companies and partners to achieve independency from fossil-fuel energy sources?
- Do you use energy efficiently?

Our Pathway for Sustainable Business considers these aspects in its methodology, and contributes to the achievement of Global Goal #7

<별첨 2 : OECD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추세>



<별첨 3 : 과거 북한 지역 발전설비용량 추세>



<별첨 4 : 전력 생산 체계에서 전력 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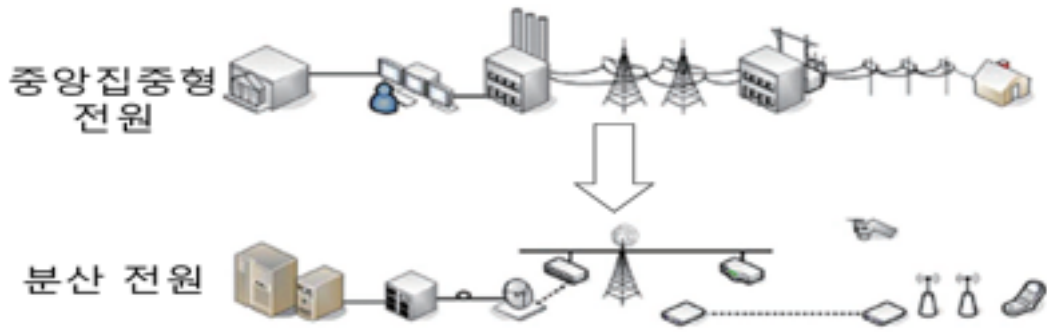
<별첨 5 : 스마트 그리드 설명>



<별첨 6 : 마이크로그리드 모식도>



<별첨 7 : 중앙집중형 전원과 분산 전원>



<별첨 8 : 과거 북한 정부의 재생에너지법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3호로 채택

제1장 재생에너지법의 기본

제1조 (재생에너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리용을 장려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국토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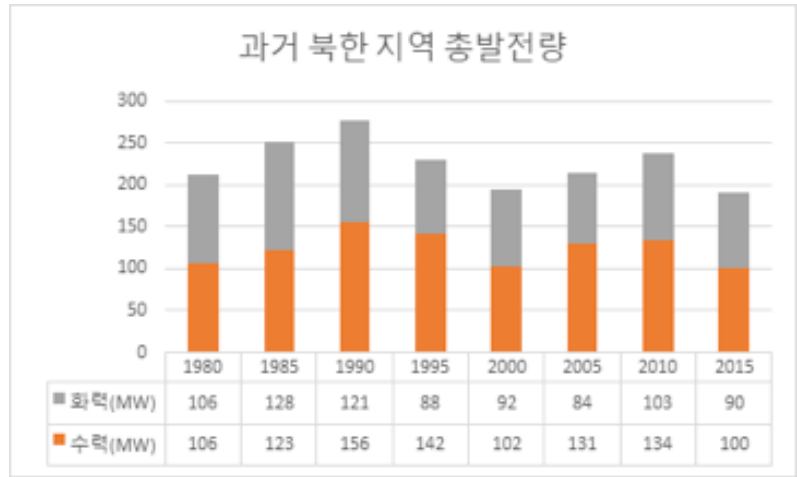
이 법에서 재생에너지란 태양열 및 빛, 풍력, 지열, 생물질, 해양에너지 같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 (재생에너지 개발 및 리용의 장려원칙)

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리용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재생에너지를 널리 개발하고 리용하는것을 적극 장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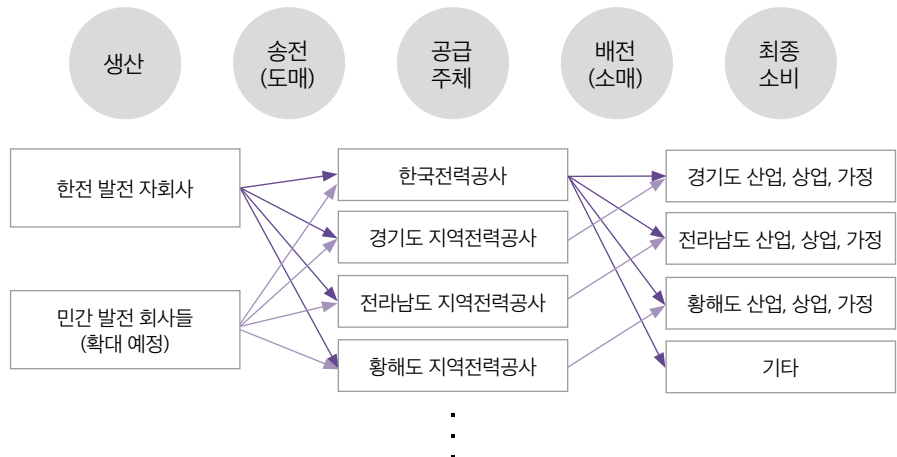
<별첨 9 : 과거 북한 지역
총발전량 추세>



<별첨 10 : FIT와 SEG 제도 비교>

구분	FiT(Feed-in-Tariff)	SEG (Smart Export Guarantee)
주요 내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원에 대해 장기계약을 통해 보조금 지원	소규모 재생에너지 스마트 미터링 확대, 판매-발전사업자 전력판매 계약 자율화
보조금 지원 범위	발전사업자 생산전력 전량	생산전력 중 실제 판매 전력량
제도 목표	1.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 초기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1. 에너지 시스템 고효율화 및 비용절감 2.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별첨 11 : 통일 한국 전력 산업 밸류 체인(가상)>



3. 대본 예시 2

제 5회 우수상 팀
통성명

제목 : 함께 이룬 통일, 함께 이룰 미래 안건 : DMZ 중부지역 개발계획 : 오늘의 회복, 통일마을 조성사업

S#1 개회 및 국민의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아이고 (땀을 닦으며), 요즘 갑작스레 더워서 그런지, 목이 마릅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은 장관님께서 특별히 고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천지수를 자리에 비치해 놓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북한학도로서 언제 백두산 물을 먹어보나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따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야, 마셔보니까 삼다수보다 물맛이 좋은데요? (다들 하하 호호 웃는다) 이제 슬슬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무위원 총 15명 중 8명이 출석하여 과반수가 참석하였으므로 개의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50주년 행사’ 참가로 인해 오시지 못하셨으므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대신 국민의례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차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을 세 번 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선 후)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후)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회의는 매주 개최되는 상시 회의로서 ‘국민의례 규정 제4조(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에 따라 약식절차로 구분되어 국기에 대한 경례와 경례 중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이 연주되도록 진행 중.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 이근억 주무관의 “국무회의 시 국민의례 절차”에 대한 답변 확인.

S#2

대통령 모두발언

대통령

(모두를 둘러보며) 네, 저는 오전에 통일 3주년 행사로 판문점을 다녀왔습니다. 3년 전, 판문점에서 남북통일을 선언하고 감정에 북받쳐 펄펄 올랐는데, 이번에도 연설문을 읽다가..... 허, 3년 전 그때의 감정이 북받쳐서 참..... 그만큼 남북통일은 아직도 저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커다란 감동인 것 같습니다.

통일 이전부터 통일 직후 3년간, 우리 정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진정한 통일한국,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정부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DMZ 개발 계획 역시 19년 전 나왔던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계승하여 자연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한편, 통일한국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추진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DMZ 개발 계획에 대해 교육부 장관께서는 몇 주 전 회의에서 판문점 분단 박물관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통일을 위해 우리가 아파했던 어제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토균형건설부 장관님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도로를 잇기 위하여 DMZ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짓되,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는 그린하이웨이 방식 건설을 통해 DMZ의 보존과 통일한국의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미래의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0차 국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이산가족분들입니다. 분단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고, 앞으로의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도록 정부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지난날 아픈 과거를 잊어버리고, 상처를 오늘은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 정책을 추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회복, 통일마을 조성계획'입니다. 제목만 봐도 벌써부터 몽클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럼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님과 국토균형건설부 장관님께서 다른 부처 장관님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고,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정책을 들어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3

교육부장관 정책 추진사항 및 보완사항

대통령

그럼, (교육부 장관을 가리키며) 먼저 교육부장관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정책에 대한 추진사항 및 보완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어제의 교훈’이란 주제로 추진 중인 판문점 분단 박물관 운영·활용 고도화 계획입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국무회의 때 1, 2차 회의를 거쳤기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문점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과거 분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교류협력과 분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이 장소를 어제의 교훈이라는 대주제를 갖는 교육 장소로 활용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 박물관은 크게 판문각과 자유의 집, 평화의 집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지난 회의에서 언급 드린 만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분단의 상처와 교훈, 역사를 담고 있는 판문점에서 통일 한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와 분단의 과거를 교육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판문점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지로 형성할 경우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통일의 교훈을 알리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문점 분단 박물관은 남북분단의 역사와 교훈, 통일의 미래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을 반영한 발전방안 제시입니다. 지난 회의 시 통일부장관님께서 박물관 및 전시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강사, 해설사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에 대해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교육부에서는 박물관 운영 취지에 맞는 통일 교훈 프로그램에 대하여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으며, 곧 구체적 자료와 함께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해서도 통일부와 함께 제도적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다소 회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2033년까지 전 국민 전 연령이 공감 및 소통 가능한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어제의 아픔’과 같았던 장소에서 통일 한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어제의 교훈’이 된 판문점에서 전 국민 더 나아가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와 분단의 과거를 교육하기 위한 장소로 운영 및 활용할 것입니다.

S#4
교육부 정책에 대한 발언

대통령

(만족해하며) 네,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연필을 짚고 손을 턱에 괴며) 저번에 저도 의문가는 사안이 몇 개 있어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것까지 모두 반영해서 좋은 보완책을 세워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에 대해 부처별로 협의된 구체적 사안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

(주위를 둘러보다 손을 든다. 대통령이 손으로 가리킨 후) 저희는 군에 판문점 근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의 증언을 통해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주기로 교육부 장관님과 협의했습니다.

대통령

(고개를 끄덕이며)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남북통합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

(손을 들며) 판문점 박물관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과정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것은 저희 부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다양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교육부장관을 바라보며) 박물관 관련해서 전문 교육 인력 양성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고개를 끄덕인다)

대통령

판문점 분단 박물관을 통해 '어제의 교훈'을 알려준다는 교육부 장관님의 정책에 대부분의 장관들께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다) 좋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바라보며) 교육부 장관께서는 여러 부처 장관님과 협의하여 판문점 분단박물관 조성사업에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펜을 잡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예, 알겠습니다.

S#5

국토균형건설부 정책 추진사항 및 보완사항

대통령

(국토균형건설부 장관을 바라보며) 그럼, 이번에는 국토균형건설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균형건설부 장관

지금부터 '미래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저희 국토균형건설부가 추진중인 그린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린하이웨이 사업이란 현재 분단되었던 남북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문산-개성간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나가는 DMZ 구간을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린하이웨이 사업이 추진된 목적은 친환경적 방식으로 그린하이웨이를 조성하여 평양-개성 고속도로와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두보를 만들어 향후 엄청난 물동량을 담당하게 될 통일한국 고속도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과, 이러한 개발을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번 19차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예산이 확보 가능한지에 대해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협의 끝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남북 통합 사회적 간접 자본의 예산 확대와 그린하이웨이 사업이 남북통합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그린하이웨이 산업을 비롯한 통일한국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부 장관께서 고속도로 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 문제를 우려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반드시 DMZ를 관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 파괴적 요소가 다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존의 길이 50m 정도의 생태 통로 구상 방안을 최대 2km의 에코 브릿지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환경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토균형건설부의 과제입니다. 저희는 그린하이웨이를 기반으로 완전한 통일한국 고속도로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남북 차선 통합 문제입니다. 현재 남부지역 도로는 대부분 6차선에서 8차선이지만 북부지역은 대개 2차선과 4차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를 통합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평안남도 희천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이미 산정해 놓았고 건설업계 역시 입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역시 상당한 정책보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통일로 고속도로는 단순히 DMZ 중부지역 발전방향에 국한된 것이 아닌, 통일한국의 대동맥이 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선 어떤 구체적 논의가 있었나요?

S#6

국토균형건설부 정책에 대한 발언

환경부 장관

(가볍게 손을 들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확장하더라도 자연파괴는 불가피 하기 때문에, 대체서식지 조성을 통해 DMZ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터전을 최대한 복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국토균형건설부 장관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에 국토부가 실시한 도로건설사업에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환경을 복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반영해 환경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환경을 복원하고 유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불가피한 환경파괴를 회복시키기 위한 좋은 대안인 듯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가리키며)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서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풀리셨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히 국회의 비준 통과로 국토균형건설부와 협의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향후 국토균형건설부와 TF팀을 운영하여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의논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자, 저번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정책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군요. 잠시 다들 물 한잔 마시고 합시다. (다들 기다렸다는 듯 천지수를 한입 마신다) 네,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국무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정책 의안을 들어 볼 차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함께 이룬 통일, 함께 이룬 미래의 통일한국을 만드는데 이렇게 불철주야 뛰시는 여러 장관님들 사이에서 제가 정책을 발제할 수 있다니, 정말 통일한국을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꿈만 같습니다. 분단 80년의 세월동안 이산가족 분들은 혈육과 떨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으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슬픈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마땅히 행복만 펼쳐져야만 할 이산가족 분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꿈꾸었던 행복한 통일한국이 아닙니다.

이에 저희 보건복지부는 올 해 우리 정부가 장기적 목표로 세운 DMZ 개발계획 중, 다른 부처들이 선택하지 않은 테마인 ‘현재’를 이산가족 분들과 연관시켜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오늘의 회복’을 통하여 치유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의 회복, 통일마을 조성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정책의 추진 배경, 추진 목표, 추진 계획,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80여년의 세월동안 이산가족 문제는 이념과 제도를 뛰어넘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이자 한민족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일한국 3년차인 현재까지도 경제적인 문제 및 고령화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산가족 분들이 존재합니다. 둘째, 고령화입니다. 이산가족 분들의 평균 연령은 11년 전인 2019년 기준 80.5세에서 4.5세 증가한 85세이며, 11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10,216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회복, 통일마을 조성계획’의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계획은 3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들의 평균연령이 85세의 고령임을 고려하여, 3년 안에 건설이 마무리되어 입주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령층의 이산가족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직속 통일의 마을 의료복지센터에서 전문 의료진들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입주민 분들을 관리하여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다시피 통일의 마을 1생활권과 2생활권 사이에는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은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최소한의 도로 연결을 제외하고는 개발을 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오늘의 회복, 통일마을’ 조성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지 선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DMZ 부근의 모습입니다. 현재 동부지역은 평균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산간지역이 대부분이고, 서부지역은 약 54만평의 초평도 습지 등 많은 습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지 선정 기준은 주로 평야지대가 분포되어 있는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DMZ 중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성동 자유의 마을 부지에서 2,000,000㎡ 와 기정동 평화의 마을 부지중 1,400,000㎡ 를 활용하여 통일의 마을 조성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부지 확보 방법입니다. 통일의 마을 부지 확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적 차원에서 토지 매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통일의 마을을 위한 향후 개발 방향입니다. 먼저 두 마을 중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통일의 마을 제1생활권으로, 기정동 평화의 마을은 통일의 마을 제2생활권으로 조성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통일의 마을 제1생활권은 공동거주시설이, 제2생활권은 단독주택시설 건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두 생활권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각각의 생활권 내에 주거시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여준다) 이 계획은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3개년의 계획이기에, 설정한 주거시설을 중점으로 먼저 개발하며, 실버타운 형식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며) 제1주거시설은 공동거주시설을 기본으로 하며, 체육시설과 휴양림, 변영 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시설 가운데에는 의료복지센터와 주민센터, 그리고 마트 등이 위치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제1주거시설의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그림을 보여준다) 한편 제2주거시설은 단독주택시설들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제2주거시설 내에는 제1주거시설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평화공원, 그리고 의료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그림을 보여준다) 다음의 사진이 통일의 마을 제2주거시설의 조감도입니다.

넷째, 생활권 주변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통일의 마을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통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통일의 마을 주위에는 통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도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경 10km 내에 인구 30만 명이 거주하는 개성시 중심부로 갈 수 있

는 개성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교통인프라는 모두 DMZ 바깥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에 통일의 마을 중 DMZ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기정동의 주택지구 일부를 이용하여 연결도로를 건설하던가, 혹은 통일의 마을역을 건설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또한 통일의 마을 제1생활권과 제2생활권의 교통인프라를 위하여 두 생활권 사이에 도로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주위에는 생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발만을 목적으로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섯째, 입주자 선정관련입니다. 입주비용도 정부가 90% 정도를 부담하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만약 건설 계획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안타깝게도 거주 이산가족의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의 마을 거주 이산가족에 대한 선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산가족의 기준은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을 말하며, 거주 대상 선정은 보건복지부 및 통일부가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거주 대상 이산가족 선정 기준에 대한 예시로는 다음에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로 기준을 제시해보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크게 4가지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통일의 마을 조성을 통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라는 통일의 당위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된지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일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일의 마을을 통하여 한 세기 가까이 떨어졌던 혈육들과 다시 함께 살아가는 이산가족 분들을 보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될 것입니다.

둘째, 통일의 마을 조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상기시킴으로서 분단의 교훈에 대하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분단은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3년 전 남북이 하나로 통일이 되었던 그 순간 많은 이들은 환호하였으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통일의 마을 조성을 통하여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면서 더 이상의 분단의 비극과 아픔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향후 활용방안의 가능성입니다. 이곳에 거주하실 이산가족 분들께서도 언젠가는 결국 모두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많은 분들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통일의 마을이 비게 된다면 이는 교육부 장관께서 발표해 주신 판문점 박물관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통일의 마을을 둘러보고, 이산가족 분들이 살았던 숙소에 묵으면서 그 분들을 기리도록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의 마을은, 단순히 이산가족 분들이 떠나시면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고령화된 이산가족 분들에게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속에 이산가족 분들께서 편안하게 남은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시청, 분위기 숙연) 우리는 3년 전, 이산가족 분들이 통일의 기쁨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목소리에 힘주며) 통일한국을 가장 염원하시고, 힘을 주신 이산가족 분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삶을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8

대통령 발언

대통령

(잠시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발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3년 전의 일이지만, 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그날의 감동이 눈에 선합니다. DMZ에 이산가족 분들을 위한 통일의 마을 조성이라.....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책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내주셨습니다. 이산가족 분들은 우리 정부가 마땅히 마지막까지 돌봐 드려야 할 분들입니다. 과거에 서로가 대치했던 마을에 통일의 마을을 설립한다면, 이산가족 분들은 서로가 모여 사실 수 있고 정부는 그 분들을 돌보아 드릴수도 있고 또 정부의 지속가능한 DMZ 개발 목표와도 부합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책상에 있는 품보드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보니 이게 마을 조감도였군요? (보건복지부 장관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보니 한눈에 바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어떻습니까? 이번 정책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장관님들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님?

S#9

교육부 장관, 국토균형건설부 장관 제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통일의 마을을 조성한다..... (인증을 한번 닦으며) 참신한 안건을 제시해 주셔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을 들으니 어렸을 때 한때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영어마을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살아있는 현장을 체험하고 이를 학습하여 스스로의 발전을 만들고 이를 능숙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점에서 교육부 역시 통일 이전부터 통일 교육을 통일부와 함께 진행해 오곤 했으나, 실제 통일 후 더욱 생생한 통일 교육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통일의 마을은 특히 통일 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생생한 교육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안건이 진행되게 된다면 교육부가 도울 수 있는 분야는 적극 돕고 싶습니다. (밝게 웃으며)

대통령

(고개를 끄덕인 후 국토균형건설부 장관을 가리키며) 국토균형건설부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국토균형건설부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될 사안 같은데.

국토균형건설부 장관

일단 통일의 마을 설립은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성에서 근무했을 때 가끔 기정동 마을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부실해서 보강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기차역 건설이나 기존 도로 보수 및 확장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 부분은 봉동역과 어떻게 연결할지, 도로 부분은 혹시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하이웨이 사업과 연계하여 그러한 이웨이에서 뻗어나가는 연결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대통령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향후 많은 입주자 분들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향후 판문점 분단박물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국토균형건설부 장관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토균형건설부 장관

기정동 마을에서 판문점까지 1km 정도밖에 안 났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 행히 그곳으로 연결되는 길도 예전부터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최대한 환경을 보존하는 형식으로 길을 보수하여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렇군요. (통일부 장관을 가리키며) 통일부 장관님, 혹시 예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S#10

통일부 장관 제언

남북통합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

(고민을 하며) 스읍..... 음..... 가장 비슷한 사례가 2014년에 준공했던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입니다. 센터 방문객들이 그곳에 숙소로 머물면서 DMZ 주변의 다양한 시설들을 방문하도록 해서 통일에 대한 의식 함양을 추진했었고, 실제로도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 향후 통일의 마을을 숙소로 활용하며 판문점 분단 박물관이나 기타 DMZ 내부 견학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곳을 찾은 방문객 분들이 판문점 분단 박물관과 통일의 마을에서 거주하시는 이산가족 분들을 보면서 ‘어제의 교훈’과 ‘오늘의 회복’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도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남북통합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거들 듯이 바로 이어 말하며) 그렇게 되지만 하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잠시 생각하다가) 현재 저희는 통일 이후 남북 간의 이질감이 어떤 것이 있고, 향후 어떻게 극복해서 진정한 통일한국을 만들 수 있을지 연구 중입니다. 비록 한핏줄로 이어진 가족일지라도 80여 년간 떨어져 살아오면서 분명 많은 이질감이 있을 것이

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조사관을 파견하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남한 출신 국민들과 북한 출신 국민들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결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동의합니다. 통일부의 사회문화통합정책을 위해 통일의 마을이 힘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통일의 마을 건설에 있어 입주자 선정, 향후 통일한국의 발전을 위한 활용방안 등 여러 논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관부처입니다. 향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남북통합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쌓아온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 언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웃으며) 안 장관께서 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안 장관께서는 지금 통일한국의 사회문화통합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부처에서 나온 북부지역 관련 정책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실 텐데, 굉장히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피곤하시진 않습니까?

남북통합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

(약간 과장하듯이) 아휴,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매일매일 저희 부처에 각종 자료를 문의하는 연락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각 부처 장관들께서 모두가 꿈꾸는 통일한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근무했을 때는 정책을 계획만 했지 현실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꿈꾸던 정책들을 다른 부처 장관들께서 구체화 시켜주시고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통일한국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울 것입니다.

대통령

정말 멋진 생각이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S#11

국방부 장관 제언

대통령

(국방부 장관을 가리키며)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방부 장관

저도 찬성합니다. 앞서 정책발표를 하신 두 장관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국방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정동 쪽에는 현재 국방부에서 지뢰 제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음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산가족 분들의 연세를 고려하여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네, 알겠습니다.

S#12

환경부 장관 제언

대통령

통일의 마을에 대해 여러 부처 장관께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지금 환경부 장관님 표정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아무리 기존의 마을부지를 활용하여 개발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정책제언을 들어보니 개발할 부지만 정해져 있지 아예 재건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통일의 마을 조성 과정에 있어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DMZ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최대한 환경에 영향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개발 과정에 있어서 환경부와 깊은 논의 역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그렇다면 통일의 마을을 조성하기 이전에 저희 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쪽에서는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통일의 마을 자체는 좋지만 DMZ의 환경파괴는 목인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아.....음.....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친환경적인 마을 개발이 목표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S#13

기획재정부 장관 제언

대통령

네, 그럼 여기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가리키며) 기획재정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통일의 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오랜 기간 떨어져 생활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전쟁으로 평생을 고통 받은 이산가족들을 위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산가족을 위한 실버타운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위한 병원과 마트 등 편의시설을 설립 하는데 막대한 예산투입이 예상됩니다. 아직 통일 된지 채 3년입니다. 지금은 먼저 북부지역 주요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진행 예정인 1차 한반도 북부지역 5개년개발 계획에 의거해 북부지역의 주요 도시만 개발하는데도 10년간 500조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재 통일의 마을 조성까지 추진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빠듯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흠... 장관님 하지만 이산가족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산하 연구소에서 계산해 보니 모든 시설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2천억 원 이하의 예산만 투입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산가족 분들을 위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아닙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천억 원으로 통일의 마을 하나를 건설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돈이면 북부 지역에서는 산업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이 항상 필요한 지금, 이런데 돈을 써서 관리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던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전문 의료진들을 전국 곳곳에 파견하여 관리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요시설을 먼저 개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맞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측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일의 마을을 조성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 방방곳곳 흩어져 계신 이산가족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달 많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의 마을에서 이산가족 분들이 모여 산다면 이산가족 분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쉬울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통일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퍼즐같은 것입니다. 국무회의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장관님께 다시 설명해 드리고 의논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꼬리를 흐리는 듯이) 음.....(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남북통합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

저도 물론 통일의 마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산가족 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한 출신 국민들과 북한 출신 국민들의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일의 마을은 남북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산가족 분들을 위해서 우리 통일한국 국민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손을 들며) 물론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분단을 통해 만날 수 없었던 이산가족 분들의 고통과 비교해 보자면 이루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통일 국가로서 그들에게 해드려야 하는 마땅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향후 판문점 박물관과의 연계사안을 고려해본다면 교육부에서도 깊은 공감을 합니다.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판문점 박물관은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만약 이후 DMZ에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이곳의 투어를 마무리 하고 가까운 통일의 마을 숙소에서 묵고 간다면, 학생들에게도 통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산가족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여러 장관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임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대규모 개발계획도 아니고 이산가족 분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보내실 수 있는 범위만 개발하자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가리키며) 통일이 되었을 때 기쁨의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신 분이 바로 장관님 아니십니까? (다 같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바라보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끄러운 듯 웃는다) 저 역시 이번 통일의 마을 조성계획은 남은 이산가족 분들께 더 늦기 전에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잠시 곰곰이 생각하며 한숨을 쉰다) 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 조금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서 더 계획을 확장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입니다. 일단은 이산가족 분들께는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쓰는 걸로 하고, 이에 대해서도 회의가 끝나고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향후 TF팀을 꾸려 예산에 대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14
투표

대통령

자, 이제 더 말씀하실 장관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끝났다면 이제 투표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관님께서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6표, 기권 1표, 반대 1표로 과반이 찬성하였기에 본 정책안 추진을 가결합니다.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

S#15
마무리발언, 폐회

대통령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DMZ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통일한국의 아픈 과거를 돌아보고, 그 아픈 과거를 살아오신 분들의 상처가 행복으로 바뀌는 오늘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본 국민들이 희망의 밝은 미래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통일을 이룬 우리들이 통일한국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합시다. (원팔을 올려 시계를 본다)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군요. 오늘 점심은 평양 옥류관에서 근무하셨던 주방장님께서 특별히 평양냉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아, 이제 오셨군요. 그럼 모두 더운데 얼른 냉면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럼 이상으로 20차 국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고, 모든 국무위원들은 박수를 친다)

제 6회 통일 모이콧무회의 경연대회 걸리잡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반도!

IV

제 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도담도담~ 통일을 이루자!!

전요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한달 간의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기를 쓰기 위해 그동안의 시간들을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저희 팀은 통일모의국무회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대회 준비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전공과 관심분야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어긋날 법도 한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매 순간이 즐거웠고 순조로웠습니다. 각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한 모든 팀원들에게 그저 고맙습니다. 잔뜩 사온 간식에 웃으며 열띤 회의를 했던 시간들이 하두 생생하여 한동안 계속 떠오를 것 같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많은 것을 고민했지만, 무엇보다 “미래의 통일한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라는 기본 질문에 충실히 답하고자 했습니다. 국민의 안정적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남북의 경계를 지우고 하나가 된 통일한국의 균형을 위해 ‘신기한’, ‘3지’ 정책들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 외에도 통일의 전체적인 흐름과 환경 및 국제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며 나온 최종 결과물이 ‘통일한국 스마트 E 정책’입니다.

예선을 치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이 모두에게 가장 떨리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후련함과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왔지만, 피어나는 기대감과 그만큼 떠오르는 걱정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결선에 진출하게 되어 다시 연습일정을 잡게 되었을 때, 고된 일주일이 예상됨에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고 모두의 노력을 결선에서 보여줄 수 있었음에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통일모의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통일 이후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그것도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짜는 것의 영향력과 복잡성을 실감하면서 ‘모의’국무회의임에도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완성도 있는 정책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고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팀들의 정책을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실질적 통일로 한 발짝을 내
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여준 지혜와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외에
도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얻어갑니다.

도담도담, ‘어린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미래의 통
일한국이 무탈하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담도담, 통일
이루자!”

평화와 번영의 통일한반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자.

김민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통성명(統成明). 한글을 보면 누구나 알고 있듯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반갑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자를 해석해 보면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통일을 이루어 통일한국의 밝은 미래를 꿈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팀원들은 모두 이러한 생각으로 이번 모의 국무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통일을 얼른 이루어서 남북한의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통일한국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하며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처음에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했고, 시험기간 및 전공 발표기간과 겹쳤으며, 운 좋게도 예선과 결선에 진출한 이후에는 세종시라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왕복해야 했기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등, 피로도는 다른 팀들에 비해 훨씬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북한학과의 학술소모임의 타이틀을 가지고 준비하는 대회이니 만큼, 학과 내부에서 ‘적절한 실적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시선은 물론, ‘저런 대회에서 너희는 수상할 만 한 실력이 못 된다.’라는 좋지 못한 시선이 공존하는 부담감도 매우 큰 대회였습니다. 팀원들 역시 ‘우리가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를 걱정하면서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앞서는 대회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촉박하고, 걱정만 앞선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행히 여러 선배들의 응원과 도움, 무엇보다 팀원 전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대회를 준비하다보니 준비하는 데 점점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수상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꿈꾸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후회 없이 마음껏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즐겁게 준비했고 ‘통일한국을 위해 우리는 어떤 정책을 낼 수 있을까?’는 진지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교훈, 통일의 마을 조성사업’은 두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나온 주제였습니다. 첫째, ‘이산가족 분들을 위해서 통일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통일 이후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주목하는 시선은 많았지만 정작 이산가족 분들께 통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선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순히 지금처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산가족 상봉에 집중하는 시선만 있지, 통일 이후에는 매우 고려화될 수밖에 없는 이산가족 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시선이 없는 것에 저희는 주목했습니다. 둘째, ‘향후 DMZ

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입니다. 지금까지 DMZ를 평화공원으로 활용하거나, DMZ를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거나,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런 DMZ의 무궁무진한 활용가능성에 주목하여, 통일 이후 자연환경을 되도록 보존하면서 어떻게 DMZ를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나온 것이 'DMZ 내부의 자유의 마을, 평화의 마을 부지를 활용하여 과거의 아픔을 회복하고, 이산가족 분들에게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을을 조성한다'는 통일의 마을 조성사업이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저희 팀은 결선에 진출할 수 있었고, 다른 3팀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정책도 정말 좋았습니다.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북부지역의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등등 모두 통일한국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었고, 또 저희 팀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아름다운 통일한국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의국무회의의 슬로건은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였습니다. 지금은 저희 청년들이 생각하는 보잘것없고 전문성 없는 정책일지 몰라도, 이번 국무회의를 준비하면서 추진했던 계획들이, 수없이 오고가며 했던 이야기들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려상 -

동북아 번영을 위한 힘찬 도약: 한반도 에너지 협력 기금법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

정다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한반도가 미래다!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안녕 하세요. 저희는 한반도미래연구회입니다.”

우리 팀 이름은 ‘한반도미래연구회’이다. 사실 이 이름은 우리 팀원들과 내가 함께 하는 중앙대학교 통일동아리의 이름이기도 하다. 우리는 멤버 구성은 다를지 언정 매년 동아리 차원에서 이 대회에 참가해왔는데, 이번 연도에는 특히 더 치열하고 뜨겁게 준비했다.

돌아보니 이번 5월 한 달은 불타는 밤의 연속이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니 대 본 제출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아 팀원들끼리 거의 매일 저녁 만났다. 먹고 토론하고 쓰고, 또 먹고 토론하고 쓰고……. 모두가 막차를 타기 일쑤였고 밤샘작업이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지치지 않았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설렌다는 건 그 날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라. ‘언젠가 올 미래’로만 생각했던 통일을 우리 앞의 현실로 놓고, 각 부처 장관이 되어 정책결정자의 관점으로 통일한국을 설계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서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뜨겁게, 행복하게 즐겼던 것 같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공을 들였던 부분은 주제 선정이었다. 주제에 관한 토론만 일주일 가까이 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통일한국이 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 통일한국이 되었을 때 직면할 상황, 정체성, 사회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통일한국이 꼭 거쳐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추렸고, 그 안에서 다시 우리 팀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녹아내려고 애썼다. 서로가 생각하는 통일한국은 조금씩 다 달랐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토론을 통해 점차 구상을 하나로 모아가고 세밀히 다듬어갔다.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서 국무회의를 수없이 한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한반도에너지 협력 기금법’이었다. ①북한 지역 전력 수요 충족+②인프라 구축+③지속가능한 국토개발+④국제사회와 협력+⑤동북아 에너지경제공동체 이렇게 5개 아이디어의 총 집합으로, 통일한국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거시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돌아보니 이 하나의 정책 구상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숙고의 시간을 거쳐야 했던가. 끝까지 이 도전에 함께 해준 우리 팀원들, 강태경, 강현, 김송현, 남재준, 심서연, 윤선우, 임충혁! 모두에게 너무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 전하고 싶다.

끝으로 우리 팀이 기획안에 썼던 대회 참여 동기 글을 언급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한반도미래연구회에 모인 우리는 통일이라는 변화를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주할 통일 시대에 우리 스스로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더 이상 추상적이고 실제 없는 구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안으로서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국무회의라는 플랫폼을 빌려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통일한국을 그리고자 했고 타당한 논리로 그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어서 매우 기쁘다. 청년 대학생으로서, 미래세대 한반도의 주역으로서, 통일 모의국무회의를 경험한 것은 정말이지 뜻깊은 경험이었다. 무엇보다도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으로 남지만 함께 꾸는 꿈이라면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대회를 마무리한 지금, 우리 각자는 다가올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로서 그 역량을 한층 높였으며, 우리 팀의 도전 또한 통일한국의 미래에 있어 유의미한 기여를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디 우리 모두의 진심이 통일한국에 온전히 닿기를…!

제 6회 통일 모이콧무회의 경연대회 걸리잡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반도!

IV

제 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현장

예선 진행 현장





결선 진행 현장





최우수상 시상





우수상 및 장려상 시상





<붙임1>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합) 현황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개요

연혁

- 1983.8.27 북한 통일관련 학술행사 개최 등 대학통일문제연구소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창립
(초대회장 : 민병천(동국대), 85개 대학연구소 참여)
 - 2009.2.4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로 명칭 변경
 - 2010.11.16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설립 등기
 - 2018.3.~현재, 김학성 상임대표 취임 (현재 78개 대학, 88개 연구소 가입)
- ※ 역대 회장 : 2007 우성대(목포대), 2008~2011 김연철(한남대), 2012~2014 유호열(고려대), 2015~2017 김태일(영남대), 2018~현재 김학성(충남대)

협의회 개요

- 설립목적 : 민간차원에서 대학생과 시민의 건전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 연구 및 학문 교류와 정책 개발을 통하여 통일정책 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 대학생 및 시민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통일정책의 연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통일 관련 학술 교류 및 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협조

임원진 명단

보직	성명	소속	보직	성명	소속
상임대표	김 학 성	충남대학교	고문	강 성 윤	동국대학교
공동대표	김 재 한	한림대학교		김 연 철	한남대학교
	김 창 희	전북대학교		유 호 열	고려대학교
	임 경 훈	서울대학교		김 태 일	영남대학교
	김 재 기	전남대학교	감 사	여 현 철	국민대학교
	진 희 관	인제대학교	사무총장	김 종 법	대전대학교
	김 정 수	대구대학교	사무국장	최 정 목	배재대학교

제 6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발행일 : 2020년 9월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전화 02) 901-7074 팩스 02) 901-215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제 6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모의국무회의 가이드북



통일부
통일교육원